‘전기료 폭탄’ 손 본다…가정용 누진제 개편논의 본격화

산업부-한국전력, TF 첫 회의

문제점 평가, 토론회 등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개선안 마련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전기요금 개편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정부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민간위원 중심의 TF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이 많이 쓴다는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소득 1인 가구가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보다 전기를 덜 써 더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앞으로 TF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軍 PX 입점위한 ‘원가절감’… 품질저하 우려

원가대비 할인률로 PX제품 선정
자율경쟁 방식으로 품목선정해야

해병대 위장무늬 가방을 비롯한 현용 국군 위장무늬를 사용한 잡화들이 충남 천안의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군 마트(PX)에 판매되는 장병용품이 ‘제 살 깎이식 경쟁’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군용 위장무늬가 들어간 속옷 및 의류 가방 등 잡화류가 중심인 장병용품은 군 마트에서 판매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원가대비 할인률’이 큰 제품이 선정되고 있다.

원가를 공개해 정부가 이윤을 9%까지 보장해 주는 방산물자가 아님에도, 위탁판매 형태의 장병용품이 원가에 대한 할인을 통해 선정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한 군수품 관련 전문가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품에 대한 최저 생산비용인 원가에 최대 할인율을 적용해 군 마트 판매품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군납과 달리 군 마트가 대신 판매를 해주는 방식인 만큼 싸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업체의 재고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원가 검증기관의 원과 검증 과정에는 인건비의 잘 못된 산정 등의 문제를 품고 있다”면서 “실제 군 마트에는 원가검증을 마친 제품보다 더 조악한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위 부대별 군납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장병용품 판매 선정 방식은 현행 법령을 위반할 소지도 크다고 우려한다.

한 군납업체 관계자는 “국군의 화강암 위장패턴 등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돼 있어 불법적 사용이 금지돼 있다”면서 “민수시장에 유통되는 유사 제품들은 위장패턴에 들어가는 색상 중 하나를 다르게 바꾸는 편법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제품들이 장병용품으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 위장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색상과 구조를 가진 유사군수품을 단속하는 ‘군복 및 군장구류에 관한 법률’을 군 스스로 위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명부대에 ‘컴뱃셔츠’를납품하는 H사는 롯데마트에 판매부스를 열어 군용 위장패턴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 법령위반 사실을 알고 있느지 문의를 넣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병용품을 선정하는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원가공개의 할인율 적용은 0.1%에서 시작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위장패턴의 경우 전체 색상 중 하나만 다르면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군사선진국의 PX에서는 고품질의 브랜드가 합리적인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의 군 마트 판매품목 선정도 외국 처럼 최소한의 규정으로 자율경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주요인사들, 일자리 창출 ‘합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일자리 워크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기소, 예상했던 일… 당황스럽지 않아”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진실은 드러날 것” 기소혐의 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광풍이 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43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지 않다”며 “광풍이 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 순간에도 온갖 영역에서 벌어지는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이라며 “공정사회와 대동사회를 원하시면 (민주당) 탈당이 아닌 입당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약 3분간 입장문을 읽은 이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이 지사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극우 사이트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경찰 의견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부인 김씨는 인터넷 아이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해당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었다.

/이범종 기자 joker@

농기계 완제품 수출 넘어 ‘플랜트 수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中에 70만 弗 ‘혈액비료생산 플랜트’

우리나라 농기자재 산업이 제품수출을 넘어 플랜트(설비) 수출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농기계·비료·농약 등 완제품 수출액이 2억 달러에 이른 데 이어, 처음으로 플랜트 수출도 성사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축산혈액 자원화 업체인 ‘나눔’은 올해 8월 중국 바이어와 7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고, 이달 내 중국 다롄(大連)에 혈액 비료 생산 플랜트를 설치한다.

이번에 수출하는 혈액 비료 제조설비는 충북 음성 생산 설비의 10분의 1 규모다. 중국에서 혈액 비료를 생산해 현지에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재단은 “그동안 혈액 비료는 미국·벨기에·일본 등에서 기술을 선점해 높은 가격을 받고 있었다”며 “중국은 자체 생산기술이 있지만,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완제품이 아닌 플랜트 수출은 현지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줄이고, 통관 기준이나 정치적 상황 같은 비(非)관세장벽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시간과 절차가 간소화돼 현지 시장에 빨리 진출할 수 있는 점도 경쟁력이다.

재단은 국내 우수 농기자재 기술과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지난해 1억20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2억 달러 수출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테스트베드를 통한 수출 성과는 약 8000만 달러로, 지난해 6000만 달러보다 약 33.3% 늘어났다. 이중 농기자재 분야가 전체 수출의 90%를 넘는다.

재단은 카자흐스탄에도 ‘한국형 스마트팜’을 설치해 플랜트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신 웅기자

도서민 여객선 이용때 차량운임 지원폭 확대

해수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세종=최신웅 기자